

태 국

통신시장의 실질적 자유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

태국은 동남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6,1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비교적 높은 소비성향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통신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이자 자체 통신시장의 성장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태국 정부는 1997년에 통신시장 개방 원칙을 확립¹⁾하고, 2001년 10월 이후의 본격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였으

나, 통신산업 자유화 방법에 관한 논란으로 그 시행시기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평균 보급률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동전화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이동전화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6.5%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표 1〉 태국 통신분야 주요 지표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제성장률	9.3	-1.5	-10.8	4.2	4.3
인구	58.1	58.7	59.3	60.0	60.6
유선전화보급률	7.2	8.2	8.5	8.7	8.7
유선전화증가율	20.6	14.9	4.4	3.5	0.7
이동전화보급률	3.2	3.8	3.3	3.9	5.0
이동전화증가율	42.1	19.5	-10.3	18.3	30.6
인터넷사용자증가율	0.0	87.5	33.3	300.0	50.0

자료: www.worldmarketsanalysis.com.

1) 태국 정부는 1997년 11월 4일자로 통신개발계획(Master Plan for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의 골자는 국영 통신기업 민영화, 이익분배계약 폐지, 사업면허제 실시, 통신시장의 점진적 개방, 독립 감독기관인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 등임.

〈표 2〉

태국 통신분야 사업 구조

서비스 분야	국영사업자	민간사업자	시장개방일정
국제전화	CAT	-	2006년
시의전화	TOT	-	2004년
시내전화	TOT	TA(방콕), TT&T(지방)	2006년
이동전화	TOT CAT	AIS, Digital Phone Co., Digital Total Access Communication, Hutchison CAT Wireless, CP Orange	현재 진입가능
인 터 넷	CAT	약 16개 사업자	현재 진입가능

자료: 〈표 1〉과 같음

성장률이 높은 이동전화 부문에 2개의 국영 통신기업 및 5개의 민간 통신기업이 통신서비스 제공에 참여하여 사용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탁신 총리 일가가 운영하는 통신재벌회사인 신기업그룹(Shin Corporations Group)의 자회사인 Advanced Info Service(AIS)가 신규 가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양대 국영기업의 통신시장 독점 지속

현재 태국의 통신시장은 국영 통신기업인 태국전화공사(Telephone Authority Thailand: TOT)가 국내 통신시장을, 그리고 태국통신공사(Communicatio Authority of Thailand: CAT)가 전화, 터넷, 우편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국제 통신시장을 각각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민간통신사업자는 국영기업과 계약을 맺고 영업이익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국영기업에 분배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시장에 참가한 기업은 AIS, TelecomAsia(TA), Th Telephone and Telecommun

cation(TT&T) 등이다. 외국계 사업자로는 프랑스 통신회사인 Orange가 유일하게 진출해 있다.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및 이익분배계약 폐지 논란 등으로 자유화 지연 예상

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신협정에 따라 현재 국영 통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시장을 2006년까지 개방하여야 한다. 탁신 정부가 통신시장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통신서비스법안(Telecommunications Service Act)이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통신시장 자유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유화 조치의 골자는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단계적 허용, 그리고 민간 통신기업과 국영 통신기업간의 이익분배계약(profit-sharing concession)폐지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한도를 설정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통신시장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2001년 10월에 개정된 통신서비스법안에

서는 민간 통신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25%로 제한되었다. AIS를 제외한 주요 민간 통신기업의 외국인 소유한도는 이미 25%를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동 법안은 국내외 통신업체와 민간단체로부터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태국 정부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2006년까지 49%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신시장의 전면 개방은 2010년 이후로 예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의 철폐라는 당초의 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편 이익분배계약의 폐지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정 민간 통신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태국의 민간 통신기업은 국영기업과 BTO(Built-Transfer-Operate)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이익의 일부를 국영기업에 분배하는 대신, 동 사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 왔다. 1997년 11월 통신시장 자유화 원칙이 확정된 이후, 이익분배계약은 통신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

고 특정 업체의 시장독점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통신시장 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결국 2002년 1월 7일, 국가기업정책 위원회는 국영 통신기업과 민간 통신기업간의 이익분배계약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라 민간기업이 국영기업에 대한 이익분배를 2006년부터 중단한다면, 정부로서는 약 3조 바트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인 AIS는 2015년까지 25년의 이익분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협정의 폐지로 약 1조 바트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익분배계약 폐지의 시행이 늦어진다면, 2002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영 TOT와 CAT의 민영화와 주식 상장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자유화와 시장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鄭顯唱】

2) 민간 통신회사가 통신망을 건설한 후, 이를 국영기업에 양도하고 그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의 계약임.